

‘변론 11회·증인 16명’…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 매듭

현재,尹 탄핵심판 과정

국회, 두차례 표결 끝에 탄핵안 의결
대통령 집무집행 위헌·위법성 심사
윤, 3차 변론부터 심판장 직접 출석
헌법재판관, 역대 최장기간 평의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하며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현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현재에 접수했다. 일주일 앞서 열린 1차 탄핵안 투표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했다.

사건을 접수한 당일 현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12월 19일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고 20일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

됐다.

현재는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했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만에 끝났고 이를 뒤 열린 2차 변론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를 뒤 열린 3차 변론부터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측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 변론에 16명의 증인이 나왔다.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으나 현재는 다음 변론부터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5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광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등에 관해 양측의 질문을 받고 증언

윤석열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4일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현재 접수
16일	현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첫 출석 (이후 9차 제외 11차까지 출석)
15일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3월 8일	윤 대통령 석방
4월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4일	탄핵심판 선고일



했다.

국무위원으로는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증언했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로 받

았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증언했다.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자 현재가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인 2월 20일 오전으로 잡히자 현재가 탄핵심판 변론 시작 시간을 같은날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추기도 했다.

현재는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현재 결정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이날 고지한대로 사흘 뒤인 4일 선고하게 되면서 현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에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것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음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이진숙·한덕수 ‘전해 대립’ 최재해·이창수 ‘전원 일치’

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재판관 4명·3명 각각 ‘동조현상’
6인 이상 찬성 파면·미만 복귀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진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현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그 뒤에 나온 주요 사건들은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현재는 2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같은날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별개 의견도 없었다.

3월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4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3월 27일에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분산됐다.

의견의 동조 경향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4인과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3인이 각각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에 따라 공직자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8(인용)대 0(기각·각하) 전원일치부터 7대 1, 6대 2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5대 3, 4대 4 등 견해가 엇갈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현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각하 결정이 선고된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외부 둘러보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

경찰, 현재 인근 ‘진공상태화’ 조기 착수

반경 100m가량… 교통통제도 시작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대책 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되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

경찰은 1일 오후 1시 부로 현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현재 앞 국민번호인단 농성전막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이를 전부터 이 지역을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계획

이었는데 앞당긴 것이다.

경찰의 통보를 받은 국민번호인단 등은 현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전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선고일 발표 직후부터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고 있다.

선고일에 준하는 경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안국역사거리에서 현재 방향으로 향하는 복춘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하는 등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2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를 열어 경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청 지휘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및 경비·정보부장, 기동본부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연합뉴스

본사인사

△ 노병하 디지털콘텐츠부장

〈2025년 4월1일자〉